

한은 지역경제 보고서

가혹한 코로나 불황... 자금·채용·투자·생산 '빙하기'

설비투자 전면 보류·차질 62%
규모 영세할수록 코로나 충격 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부진 심각
코로나로 인력 축소 기업 약 13%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력을 줄이고 설비투자도 전면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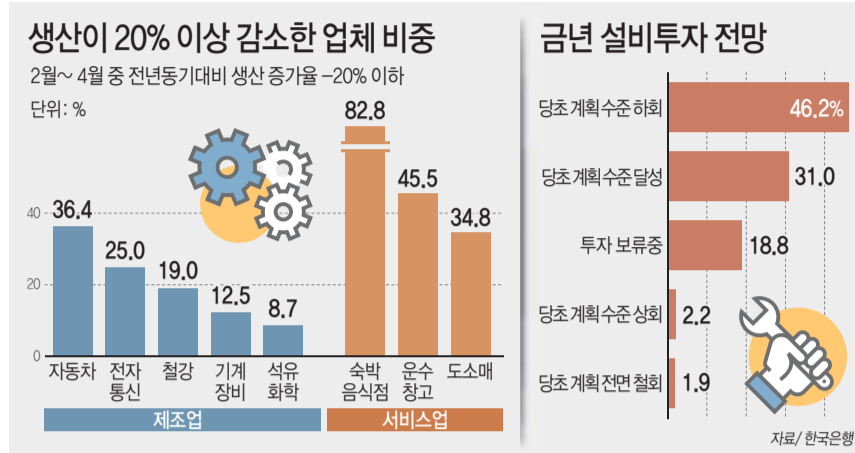
특히 고용효과가 컸던 서비스업의 고용감축이 두드러졌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인력을 더 줄이겠다는 곳들도 많았다.

25일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업황, 고용·투자·자금상황, 조달리스크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76.4%는 올해 2~4월 중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 업체는 제조업이 263곳이었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각각 158, 30곳이었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았다.

생산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52.4%



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8.9%, 26.7%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부진이 심각했다.

제조업은 약 절반 가까운 업체가 생산 감소폭이 20% 미만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 감소폭이 큰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은 82.8%에 달하는 업체가 생산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사태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대다수 업체들은 부분가동(28.0%)을 비롯해 ▲유·무급 휴가 확대, 순환휴직, 투자 축소·보류 등 긴축경영(18.8%) ▲일시 조업 중단(12.9%) ▲

고용 축소(10.9%) 등으로 대응했다. 재택근무를 포함해 정상영업을 한 기업 비율은 27.4%에 불과했다.

지난 2~3월과 비교한 4~5월 중 생산 및 매출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업체가 34.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65.1%로 파악됐다.

향후 자사의 업황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6.4%가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내년 이후 회복(23.6%)이나 악화 후 정체(16.2%), 악화 지속(11.9%) 등 부정적 예상도 과반을 차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을 축소할 경우는 전체 응답기업의 13% 수준으로 조

사됐다. 서비스업체의 19.3%, 제조업체의 9.7%가 이에 해당됐다.

고용을 축소할 경우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10% 이내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고, 10~20% 줄였다는 업체도 25%를 차지했다. 30% 이상 인력을 줄였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서비스업체였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력을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27.1%가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신규 채용규모에 대한 전망은 당초 계획 수준 채용 또는 계획 수준 상회 응답률이 34.3%에 그쳤다. 반면 채용을 보류하겠다는 답변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당초 계획 수준 하회 또는 전면 철회 역시 28.4%에 달했다.

5월 기준 업체들의 설비투자 진행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응답 비중은 38.0%에 그쳤다. 다소 차질, 상당한 차질 또는 보류 중이라는 응답은 6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설비투자 실적은 당초 계획 수준 하회 가 46.2%며, 계획했던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계사들의 생산 및 물류차질 등으로 영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부품 등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약 30%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조달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우려를 나타냈다.

조달 리스크의 대부분은 수입·통관·물류 차질(42.5%)과 해외업체 생산 차질(39.4%)에 연유했다. 이 밖에 물류비용·수입가격 인상 및 자금부족(12.5%), 협력업체의 도산·폐업(5.6%) 등도 적지않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5월 기준 업체들의 자금사정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중은 52.8%에 달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의견(41.9%)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의 신용 또는 담보 여력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21.2%)도 나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oul.co.kr

감감한 지역경제... 불확실성 '여전'

수도권·강원 등 제조업 생산 감소세
극심한 침체였던 대경권 경기 완화
호남권, 정체마진 악화로 업황 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내 지역경기가 더 악화됐다. 다만 1분기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대경권(대구·경북)은 경기가 다소 나아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2020년 6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권역별 경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악화된 가운데 전분기에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대경권을 비롯해 수도권, 제주권의 경기 하락세는 다소 둔화됐다.

지역경제보고서는 한은의 15개 지역분부가 지역 경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권역 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기술한 보고서다.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동남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완성차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주요 업체가 LCD 생산시설을 축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경권은 자동차부품, 철강, 휴대폰 등이 수요 둔화로 감소했다.

동남권은 자동차 및 부품이 수출 급감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계장비와 철강도 국내외 전방산업 수요위축으로 부진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체마진 악화로 업황 부진이 심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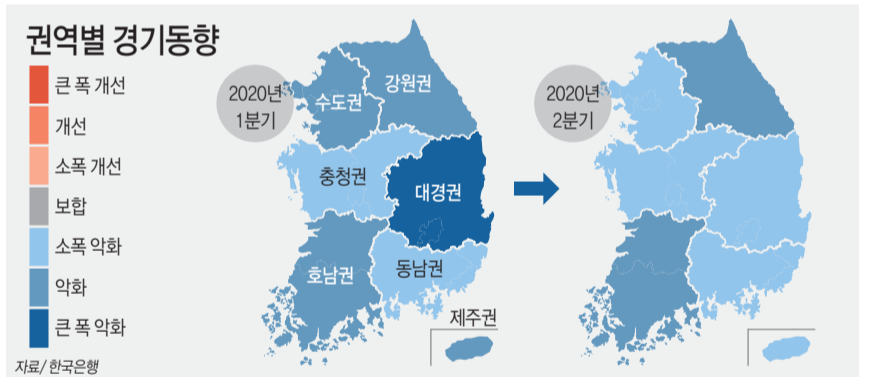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은 호남권이 소폭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나머지 모든 권역

에서는 감소폭이 둔화됐다.

호남권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수도권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선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운송이 부진했고, 대면거래 기피로 부동산업도 감소했다.

강원권은 5월 연휴기간 여행수요 증가에도 외출자제 분위기가 지속되고 주요시설이 휴장하면서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줄었다. 제주권은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대형 면세점 및 운수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2분기 중 소비는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제주권은 관광업 침체에 따른 소득여건 악화로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확산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과 대경권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소폭 늘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음식료품, 위생용품 등 비내구재 소비도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했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43만6000명이 줄어 전분기 대비 큰 폭 감소로 전환됐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나머

지 권역에서는 모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향후 권역별 경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지만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증가하겠지만 호남권은 소폭 감소, 나머지 권역은 2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권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중소 돕는 '원자력환경공단 동반성장몰' 구축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동반성장몰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도입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의 동반성장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추

진됐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대량구매를 실현하고, 임직원의 중소기업 제품 자율적 구매를 통한 착한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사에 동반성장포인트를 배정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 도출에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6일부터 진행

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발맞춰 동반성장몰 내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소비 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동반성장몰은 판로개척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며 "중기유통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민간 1호 벤처확인기관 선정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감별사' 역할을 할 민간 1호 벤처확인기관이 됐다.

벤처협회는 내년 2월 12일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그동안 기술보

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개선해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